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78
----------	-----

제출일자 : 2009. 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제안 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법률 제9174호, 2008.12.26)됨에 따라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일부를 조정하고 사용목적에 따른 대부료 감액률을 일원화하며,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대부료 요율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개정으로 공유재산심의회 업무 중 「“공정이 50퍼센트 이상 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절차를 생략 가능토록 개정(안 제4조 제1항 제2호)
- 나. 공유재산 대부요율 적용시 허가 준공된 주거용 건물뿐 아니라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도 동일한 대부요율(25/1,000)을 적용하여 저소득주민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안 제27조 제3항 제3호)
- 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34조의 개정으로 40~50%까지 차등 적용하던 대부료 감액율을 70%로 일률적으로 조정하여 행정 효율성 향상 도모(안 제33조)
- 라.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건축

물의 건축연도를 1981. 4. 30일 이전에서 1989. 1. 24일 이전으로
완화하여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지원(안 제39조)

3. 근거법규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34조, 제96조

나. 「국유재산법 및 시행령」 제26조, 제44조의2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5. 참고사항

○ 관련 법규 :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행정·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영”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건축법」 제49조제1항”을 “「건축법」 제57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행정재산·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한다.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중 “행정·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5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23조, 제37조 및 제41조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27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주거용 건물(「건축법」에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를”을 “주거용으로”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원석시가라 함은”을 ““원석시가”란”으로 하고,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입방미터”를 “제곱미터”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3조 중 “당해 년도”를 “해당 연도”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를 “100분의 70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삭제한다.

제37조제3항제3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9조제4호 중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 이외의 건물(「특정

건축물정리에 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을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구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

용되고 있는 토지”로 하고 “「건축법」 제49조제1항”을 “「건축법」 제57조제1항”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및 제66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4조제2항 중 “2인”을 “2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생략) 1.(생략)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영”이라 한다) 제 3조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 이상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삭 제>
3. 행정·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3. 행정재산----- -----
4.(생략) ②(생략)	4.(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1.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산의 취득 처분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영”이라 한다)-----
2.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2. 「건축법」 제57조제1항 ----- -----
3.(생략)	3.(현행과 같음)
4. 다음 각 목의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다(생략)	4.----- 행정재산 ----- ----- 가.~다(현행과 같음)
제3장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제3장 행정재산
제17조(관리 및 처분) 관리책임 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보존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관리 및 처분) ----- ----- 행정재산 ----- ----- -----
제18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보존 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에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당해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18조 (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 ----- ----- -----, 해당----- ----- -----
② 행정·보존재산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재산 ----- ----- -----.
1.(생략)	1.(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2.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u>행정·보존재산</u> 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 <u>행정</u> <u>재산</u> ----- -----.
제19조(사용·수익허가) <u>행정·보존재산</u> 을 사용·수익허가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수익허가) <u>행정재산</u> ----- ----- -----.
1.~7.(생략)	1.~7.(현행과 같음)
제20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u>행정·보존재산</u> 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같음할 수 있다.	제20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 ----- <u>행정재산</u> ----- ----- -----.
제21조(<u>행정·보존재산</u> 의 위탁관리) ①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u>행정·보존재산</u> 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 12조 제2항과 제3항, 제 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1조(<u>행정재산</u> 의 위탁관리) ①----- ----- --- <u>행정재산</u> ----- ----- ----- -----.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u>행정·보존재산</u> 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 3자가 전대 사용하는 <u>행정·보존재산</u> 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②----- <u>행정재산</u> ----- ----- ----- <u>행정재산</u> ----- -----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u>행정·보존재산</u> 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 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③----- <u>행정재산</u> ----- ----- ----- ----- ----- ----- -----.
④(생략)	④(현행과 같음)
⑤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	⑤-----

현 행	개 정 안
<p>는 경우에는 법 제 27조제 2항 및 영 제 2조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보존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 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p> <p>⑥(생략)</p> <p>제4장 잡종재산</p> <p>제23조(연고권 배제) 잡종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p> <p>제27조 (대부료의 요율) ①영 제31조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p> <p>②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p> <p>1.~2.(생략)</p> <p>③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p> <p>1.~2.(생략)</p> <p>3. 주거용 건물(「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2호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p>	<p>-----</p> <p>-----해당 행정재산</p> <p>-----</p> <p>-----</p> <p>⑥(현행과 같음)</p> <p>제4장 일반재산</p> <p>제23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 -----</p> <p>-----</p> <p>-----</p> <p>-----</p> <p>-----</p> <p>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p> <p>-----</p> <p>-----</p> <p>-----</p> <p>-----</p> <p>-----</p> <p>-----</p> <p>-----</p> <p>②-----</p> <p>-----해당-----</p> <p>-----</p> <p>1.~2.(현행과 같음)</p> <p>③-----</p> <p>-----해당-----</p> <p>-----</p> <p>1.~2.(현행과 같음)</p> <p>3. 주거용으로-----</p> <p>-----</p> <p>-----</p> <p>-----</p> <p>-----</p> <p>-----</p> <p>-----</p> <p>-----해당-----</p> <p>-----</p>

현 행	개 정 안
<p>④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p> <p>1.~5.(생략)</p> <p>6. 서울·인천·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당해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p> <p>제29조 (토석채취료 등) ①(생략)</p> <p>②제1항의 원석시가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p> <p>③~④(생략)</p> <p>제30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②(생략)</p> <p>③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당해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p> <p>1.~5.(생략)</p> <p>④~⑤(생략)</p> <p>제33조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영 제 16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지목상 전, 답을 경작용으로 사용 대부하는 경우 : 100분의 50</p> <p>2.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 (거주용으로만 사용되며, 건물 소유주와 거주자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사용 대부하는 경우 : 100분의 45</p> <p>3. 기타의 경우 : 100분의 40</p>	<p>④-----</p> <p>-----해당-----</p> <p>-----</p> <p>1.~5.(현행과 같음)</p> <p>6.-----</p> <p>-----</p> <p>-----해당-----</p> <p>-----</p> <p>-----</p> <p>제29조 (토석채취료 등) ①(현행과 같음)</p> <p>②-----“원석시가”란-----</p> <p>해당-----제공미터-----</p> <p>-----</p> <p>-----</p> <p>③~④(현행과 같음)</p> <p>제30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②(현행과 같음)</p> <p>③-----해당-----</p> <p>-----</p> <p>-----</p> <p>1.~5.(현행과 같음)</p> <p>④~⑤(현행과 같음)</p> <p>제33조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p> <p>-----해당 연도-----</p> <p>-----</p> <p>-----</p> <p>----- 100분의 70으로 한다.</p> <p><삭 제></p> <p><삭 제></p>

현 행	개 정 안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영 제 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u>잡종재산</u> 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4(생략)	<삭 제>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u>일반재산</u> ----- ----- ----- ----- -----.
②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u>잡종재산</u> 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4(현행과 같음) ②----- ----- ----- ----- -- <u>일반재산</u> ----- ----- -----.
③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u>잡종재산</u> 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생략)	③----- <u>일반재산</u> ----- ----- ----- -----.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 2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 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생략)	1.~2(현행과 같음) 3.----- ----- ----- ----- ----- ----- ----- ----- ----- ----- -----.
④영 제39조제 2항제 5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u>잡종재산</u> 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u>해당</u> ----- ----- 4.(현행과 같음) ④----- ----- <u>일반재산</u> -----

현 행	개 정 안
⑤영 제39조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 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생략) 1.~3.(생략)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 광역시 및 시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 , 기타 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다만 ,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 다만 ,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도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안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 매각시 잔여지가 「 건축법 」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결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 5.(생략) 제41조(신탁의 종류) 영 제 48조 규정에	----- ----- -----, ⑤----- ----- -- 일반재산 ----- ----- -----, 제39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현행과 같음) 1.~3.(현행과 같음) 4.----- ----- -----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구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 ----- ----- ----- ----- ----- ----- ----- ----- ----- ----- ----- ----- 「 건축법 」 제57조제1항 ----- ----- -----

현 행	개 정 안
<p>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 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p> <p>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영 제 8조제 4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u>당해</u>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p> <p>②(생략)</p> <p>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①(생략)</p> <p>②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을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p> <p>③~④(생략)</p> <p>제66조 (공유토지의 분필)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u>당해</u>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u>당해</u>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p>	<p>5.(현행과 같음)</p> <p>제41조(신탁의 종류) ----- ----- 일반재산 ----- ----- ----- ----- -----</p> <p>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 ----- -----<u>해당</u>----- ----- -----</p> <p>②(현행과 같음)</p> <p>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현행과 같음) ②----- ----- -----<u>2명</u>----- -----</p> <p>③~④(현행과 같음)</p> <p>제66조 (공유토지의 분필)----- ----- ----- -----<u>해당</u>----- -----<u>해당</u>----- ----- ----- ----- -----</p>

관 련 법 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공유재산의 구분) 법 제5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라 함은 앞으로 5년 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고,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이라 함은 건설을 위하여 지급한 기성대가에 해당하는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08.4.18>

제34조(대부료의 조정)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에의 연간 대부료 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 조정 할 수 있다.<개정 2008.4.18>

제96조 (조례의 제정·운영)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와 처분에 대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사용료율과 평가방법)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장 임대료를 고려하여 당해 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국유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한다. <개정 1989.4.10, 1990.6.30, 1996.6.15, 2000.7.27, 2007.12.28>

1.~3. 생략

4. 주거용의 경우 : 1천분의 25 이상

제44조의2(매각대금의 분할납부) ①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잠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6.6.15, 1997.10.1, 1998.9.25, 1999.6.16, 2000.7.27, 2003.6.30, 2005.6.30, 2006.10.27>

1.~2.(생략)

3. 1989년 1월 24일이전부터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와 종전의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당해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의안심사보고서

(의안번호 678)

1. 의안명 :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자 : 2009. 3. 3(수)

나. 제 출 자 : 중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 : 2009. 3. 5(목)

라. 위원회 상정 : 2009. 3. 13(금)

3.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총무국장)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 상위법령 및 관련법령의 개정안을 근거로 공유재산의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4. 주요골자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개정으로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중 「“공정이 50퍼센트 이상 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절차를 생략 가능토록 개정(안 제4조 제1항 제2호)

나. 공유재산 대부요율 적용시 허가 준공된 주거용 건물뿐 아니라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도 동일한 대부요율(25/1,000)을 적용하여 저소득주민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안 제27조 제3항)

제3호)

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34조의 개정으로 40~50%까지 차등 적용하던 대부료 감액율을 70%로 일률적으로 조정하여 행정 효율성 향상 도모(안 제33조)

라.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축연도를 1981. 4. 30일 이전에서 1989. 1. 24일 이전으로 완화하여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지원(안 제39조)

5. 관련법규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34조, 제96조

다. 「국유재산법 및 시행령」 제26조, 제44조의2

6.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홍성춘)

가. 본 개정 조례는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법률 제9174호로 2008. 12. 26 공포되고, 같은법 시행령 등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 상위법령 및 관련법령의 개정안을 근거로 공유재산의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안)임.

나. 주요내용으로는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으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의 한유형(보존용 재산)으로 통합 변경하였으며

- 특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개정으로 「“공정이 50 퍼센트 이상 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절차를 생략 가능토록 삭제하고
- 공유재산 대부요율 적용시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하여 대부요율을 25/1,000로 적용하던 것을 주거용 건물에는 일률적으로 25/1,000 적용하였으며,
- 또한 현재40~50%까지 차등 적용하던 대부료 감액율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34조의 개정으로 70%로 일률적으로 조정하고
-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축연도를 1981. 4. 30일 이전에서 1989. 1. 24일 이전으로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상위법령 및 관련법령 등의 개정안을 근거로 한 조례안 임.

7. 심사결과 : 원안가결